

# 여야 극한 대치에...광주·전남 내년도 예산 확보 비상

“대폭 삭감”...예산투쟁 나선 민주당  
내년 예산안 처리 난항 예상  
최악엔 증가율 반토막 우려  
광주시·전남도·지역정치권 공조  
치밀한 예산 확보 전략 필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예산 국회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면서 내년도 광주·전남 국고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건전 재정(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신규 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충돌로 예산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국회 차원에서 지역 현안 예산 챙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삼각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초부자 감세’로 규정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민생 관련 예산만 10조 원이 삭감됐다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해 대통령실 예산은 물론 법무부 검찰국·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권력 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인 동시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후 구제적인 삭감 예산 항목을 공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 관련 수사망을 좁혀줌에 따라 당내 결집 등을 위해서라도 예산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작정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인 동시에 내년 예산안 처리는 시작부터 난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국회는 내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오는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부 예산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이를 부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연내 처리가 쉽지 않게 되면서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반영하듯, 대통령실에선 예산안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준예산 집행 등 ‘컨디션 플랜’(비상 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쓸 수 없게 되고, 사실상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비, 인건비 등만 지출할 수 있다. 지난 1960년 준예산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의 가파른 대치 국면 등을 고려하면 조우의 준예산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은 여소야대의 구조상 예산 국회에선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는 물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예산 증감 요구를 여권이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공조,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지역 현안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 광주·전남 국회의원이 없는데다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아 과연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최악의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고 예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광주·전남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점을 지렛대 삼아 지역 정치권이 지도부와 의 소통 등을 통해 지역 현안 예산을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앞세워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26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원장, 김수연 2차장, 백종욱 3차장. 조상준 기조실장은 국감 시작 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왼쪽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윤 대통령 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4개월여 만에 사임

### 배경 놓고 의견 분분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조정실장이 4개월여 만에 사임했다.

복수의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은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 실장이 국정원에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정원 측도 연합뉴스에 “조 실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밝힌 게 맞다”고 확인했다.

조 실장은 국정감사 전날인 지난 25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 표명 하루 만인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 실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대상 국감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조 실장 사의 표명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사의 표명 배경

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정원 대상 정보위 국감에서는 조 실장의 사의 배경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라인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로, 지난 6월 초 국정원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에 발탁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尹 정부 청년정책 청사진 발표...“희망·공정·참여 3대 기조”

### 청년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내놨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청년의 현실을 꼼꼼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신명나게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에 나서야 할 청년들이 현실에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집값 상승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

는 것을 청년정책의 목표로 삼겠다”며 “희망, 공정, 참여의 3대 기조에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분야별 세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보건복지부 등은 ‘차입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청년 고용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대학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단계에 따라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의 분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중앙부처와 사·도의 청년정책을 평가할 때 기존 ‘과제별 평가’에 ‘5대 분야별 평가’를 추가해 시행하기로 했다.

총 376개 세부 과제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로 묶어 평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기존에 해당 부처에만 공개하던 것을 넘어 모든 부처의 평가 결과를 전체 부처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의 청년 정책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여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뜨거운 감자’ 된 국힘 당무감사

### “임시 지도부 감사 적절치 않아”

### 영남·수도권 의원 불만 목소리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 당무감사가 ‘뜨거운 감자’로 던져졌다.

당의 세포 조직인 전국 당협위원회의 실태를 점검하고, 부실한 곳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게 당무감사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연례적으로 해 온 당무감사를 지난해 건너뛴 만큼, 올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에 공석인 69곳의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띄우고 나면 곧바로

당무감사위원장 인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 조직을 비워둔 채로 장기간 뇌물 수 없�서 당무감사위원장 선임은 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이후 당무감사에 돌입하는 게 순서다. 의원들에게 감사에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비대위의 당무감사 추진을 불편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징검다리” 성격의 임시 지도부가 당무감사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먼저 지역구 내 경쟁이 치열한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당무감사를 탐탁지 않아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22 지스트 과학문화주간

# 2022 지스트 과학문화주간

10.31.월 - 11.11.금

**11. 1. 화**  
초청가수 공연  
중앙도서관 앞 잔디밭

**11. 3. 목**  
정호승 시인 강연  
오룡관 2층 다산홀

**11. 9. 수**  
문화행사  
콘솔라트르싱어즈 공연  
행정동 CT아트홀

**11. 10. 목**  
무비데이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광주첨단CGV

자세한 사항은  
2022 지스트 과학문화주간 홈페이지  
http://sc.gist.ac.kr 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대외협력팀 ☎ 062-715-2023  
✉ pa@gist.ac.kr 🌐 www.gist.ac.kr

📺 https://www.youtube.com/c/GIST\_YOUTUBE  
📷 https://www.instagram.com/GIST.SNS/

📘 https://www.facebook.com/GIST.SNS  
📱 http://pf.kakao.com/\_xmNxmkt